

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최장근¹⁾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번에 새로이 정권을 수립한 일본의 민주당 중심의 정부는 종래 자민당정부의 친미편중 외교정책과는 달리 대아시아중시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로서 중도우파에서 중도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 오카다 카즈야 외무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자와 간사장과 하토야마 수상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영토론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민주당내에는 무력으로 <죽도>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죽도>를 점령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구성원도 존재함.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대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공동체구성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독도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모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에서는 절대로 독도문제로 양국간의 관계가 악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오산임.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로서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정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음. 여전히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성향의 여론이 일본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에 절대로 일본의 눈치를 살피서는 안됨. 영토주권행사를 분명히 해야함.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착장 및 방파제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상주인원의 증가, 자유로운 왕래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민주당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환
- 2. 민주당정부 주요 실세의 독도 인식
 - 가. 하토야마 수상의 「죽도문제」 인식
 - 나. 오자와 간사장의 「죽도문제」 인식
- 3. 민주당의원의 「죽도문제」 인식에 대한 다양각색
 - 가. 민주당의원의 이념의 다양성
 - 나. 「죽도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입장
 - 다. 「일본영토론」의 적극론자
 - 라. 「일본영토론」의 신중론자
- 4. 외무성 기본방침의 수정 가능성 유무
 - 가. 외무성의 「죽도문제」 인식
 - 나.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게재문제
- 5. 민주당정부의 독도문제 대응의 전망

1. 민주당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환

- 종래 자민당은 「죽도」²⁾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외교 전략상의 필요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음.
 - 최근에 들어와서는 외무성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정책을 강화했고 이는 외무성홈페이지를 확대보완한 점으로도 알 수 있음.
- 이번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여 55년체제(자민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당정부를 조각했고 민주당정부는 종래의 자민당정부와 다른 정책기조를 구상하고 있는 듯함.
 - 과거 2006년 8월 11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자민당정부에 대해 「(정부가) 중국과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적인 발상임」³⁾
 - 또한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하토야마 간사장(5월 16일 대표 취임)은 「미국 추종외교에서 국제협조노선으로 전환하여 ‘아시아 태평양공동체’ 실현을 국가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음.⁴⁾ 이는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음.
 - 이처럼 민주당은 자민당의 친미일관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친아시아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함. 민주당정부의 정책전환에 있어서 한중,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한일관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역사인식문제, 과거 청산문제를 비롯해서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임.

- 하토야마 수상은 한국을 방문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당연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정부가 ‘뚝바로 역사’ 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가 3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시간적인 여유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일·한 관계를 더욱더 양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⁵⁾
-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로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해서 고찰하려고 함.
 - 과거 자민당정부의 독도정책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적인 입장을 버리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도문제를 객관적이고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임.
 -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민주당정부의 권력 중심에 있는 하토야마 수장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의 「죽도문제」인식, 그리고 민주당의원들의 「죽도문제」인식 실태, 외무성의 「죽도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의 변경여부에 관해 순차적으로 고찰하려고 함.

2. 민주당정부 주요 실세의 독도 인식

가. 하토야마 수상의 「죽도문제」 인식

- 하토야마 수상이 야당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신을 생각을 피력하였음. 이를 통해 하토야마 수상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함.
 - 2006년 4월 21일 야당의 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는 「죽도문제로 한국과 충돌하게 되면 납치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⁶⁾라고 하여 북일간의 납치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죽도문제」로 한일 양국

하토야마는 「죽도문제로 한국과 충돌하게 되면 납치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⁶⁾라고 하여 북일간의 납치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죽도문제」로 한일 양국이 부딪혀서는 안 된다고 했음

민주당 간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은 주권침해라고 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

이 부딪혀서는 안 된다고 했음.

- 이는 「납치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이고, 「죽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은 없었음.
- 2006년 5월 4일 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가 한국을 방문하여 「독도 문제는 일본의 외교적 실패」 「일본측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한다」라고 했음.⁷⁾
 - 하토야마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음.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로서 근원이 없거나 부족한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민당정부의 외교적 실패」라는 주장임.
 -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간사장의 입장에 있으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며 국가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이렇게 볼 때, 하토야마 수상은 야당 시절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개인적으로 다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6년 5월 5일, 반기문 외무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담화’를 통해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전했을 때,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하토야마는 ‘생각해보겠음.’ 라고 말했다.」고 함.⁸⁾
 - 민주당 간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은 주권침해라고 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독도가 반드시 일본 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오자와 간사장의 「죽도문제」 인식

- 오자와 이치로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바 있는 민주당의 사실상의 최고실력자임. 현재 오자와 이치로는 민주당의 간사장으로 오자와의

「죽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피교야 있음⁹⁾

- 일본의 국민여론 중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 융화(融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무리도 있음. 이에 대해 오자와는 오히려 일본이 지금까지 자기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현재도 한국, 중국, 미국의 수상들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존중해야한다.」라고 하여 과거에 할 말은 반드시 해왔고 앞으로도 할 말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하지만 오자와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한국에 「융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할 말을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음.
- 오자와의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생각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 대표시절 오자와는 2008년 11월3일 일본 도쿄(東洋)대학의 축제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1만인의 네티즌회견」에 출연하여 「죽도문제」에 대해 「나는 죽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은 한국대로 그것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한국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할 것임.」라고 언급했음.
 - 이에 대해 일부 일본 여론(네티즌)으로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에) 죽도는 역사적 사실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분명한 일본 영토이고, 「한국에 의한 죽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왜 일본 영토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¹⁰⁾
 - 이를 보면 일본 국민들이 「죽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사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홈페이지에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믿고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믿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전략적인 것으로 독도 문제의 본질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이 알 리가 없음.

일본 국민들이 「죽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일본정부 요인과 국회의원
들 사이의 대화내용 중에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
법적으로 일본영토로서
권원이 약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 일본국회 속기록을 보면,¹³⁾ 1951년 9월의 대일평화조약 체결과 그 이후 일본정부 요인과 국회의원 들 사이의 대화내용 중에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로서 권원이 약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¹²⁾
 - 민주당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전의 자민당정부와는 달리 국익보다는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민주당 대표시절 오자와는 2008년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중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한국이 실력지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치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영토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¹⁴⁾ 「서로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한 후에 소속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음.¹⁴⁾
 - 오자와는 「죽도에 대해 일한 양국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음. 철저히 대화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함. 대화를 피하면서 교과서에 게재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음.¹⁵⁾ 즉 오자와의 입장은 「죽도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셔널리즘적인 입장에서 교과서에 게재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임.
- 오자와의 이러한 발언 속에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일본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일 간에 감정만 나쁘게 하여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일 것임. 그것보다는 먼저 양국이 마주 앉아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오자와가 독도의 역사를 몰라서 자민당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것임.

- 우선적으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정당한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정당정치로 정권을 창출한 민주당정부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무시하고 「죽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할 것임. 독도를 연구하는 한 역사가(나이토 세이쥬)는 역사적으로 보면 「죽도는 일본영토로서 권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절대로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음. 오자와도 이 정도의 입장이라면 아마 그 역사가와 동일한 생각이 아닐까 함.
- 독도가 역사적 권원으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검증해봐야 한다」고 하는 오자와의 발언은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져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임.
- 오자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일본영토론자」들은 오자와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음.
 - 「한국정부가 신학습지도요령(중학교)의 ‘죽도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았음.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교과서에 게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음. 즉 ‘절차가 잘못된 것’은 한국정부이지, 일본정부가 아니다.」 「교과서에 게재하지 말라고 하는 쪽은 한국정부이고, 오자와의 논리에서는 말을 꺼낸 한국정부가 비판받아야 하는데, 오자와가 한국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고 했음.
 - 「오자와는 한국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의를 피하고 있음. 이처럼 ‘도망 다니는 도둑 국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라고 했음.

독도가 역사적 권원으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있음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학자 중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는 학자는
많지만, 일본 영토라고 논증
하는 학자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임**

- 「역사의 진실을 젊은 국민에게 가르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오자와와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음.

- 「오자와는 역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선 오자와 자신이 한국인 여성비서의 말만 듣지 말고, 외무성 홈페이지¹⁶⁾나 '1905년 이전 한국 문서나 지도에 독도의 표기가 없다'고 하는 외무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래 사이트¹⁷⁾를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음.

- 이 오자와 비판자는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 입장이기에 절대로 오자와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외무성 홈페이지와 고지도나 고문헌에 독도가 없다고 하는 사이트는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이트」임.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학자 중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는 학자는 많지만, 일본 영토라고 논증하는 학자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임. 이들 「사이트」는 「일본 영토론자」들에 의해 왜곡된 사이트임을 알아야 할 것임.

○ 일부 일본 여론에서 오자와에 대한 인식은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죽도 반환보다도 재일의 참정권에 더 열심이다.」¹⁸⁾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죽도는 일본 영토이라고 명쾌히 주장되고 있다.」라고 하여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전 대표)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음.¹⁹⁾ 이를 비난한 「독도 영토론자」의 「죽도문제」인식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 이외도 많은 여론이 다양하게 오자와의 태도를 공격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헌법, 국제법에 의거하여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다.」 「한국은 교섭의 테이블에도 앉지도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함. 이런 한국 태도는 신사적 대응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처럼 모욕적인 행위로 지지율을 올리

는 소재로 삼고 있다.」²⁰⁾

- 「이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자와 대표는 죽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²¹⁾ 또한 「일본이 수십 년간 공식적으로 국제재판을 계속적으로 신청해온 것도 모르는가?」 「민주당에는 한국의 정치요인들을 만나서 죽도문제로 공격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²²⁾ 「처음부터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할 정도이니깐.」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니 한국 영토였다, 라는 식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겠지요」라고 비판하기도 함.²³⁾

○ 오자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영유권론자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는 입장임.

-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오자와는 원래 자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자민당 정부 요인들과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구상하고 있는 민주당의원 출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음.

3. 민주당의원의 「죽도문제」 인식에 대한 다양각색

가. 민주당의원의 이념의 다양성

○ 민주당은 1998년에 창당되었음.²⁴⁾ 대표 하토야마, 대표대행 오자와, 간 나오토(菅直人), 고시이시 아즈마(興石東), 간사장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참의원의원단회장 고시이시로 내정되었음.

- 당초 민주당은 1996년 9월 신당사키가케에서 탈퇴한 간 나오토, 하토야마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을 결성했음.

- 1998년 3월에는 호소가와(細川護熙)가 정권전략회의의장으로서 주도하여 민정당(民政黨) · 신당우애(新黨友愛) · 민주개혁연합 등이 민주당에 합류하여 기존의 참여 정당은 해산하고 그해 4월 간

**오자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영유권론자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는 입장임**

민주당의 입장은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임」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나오토를 초대 당대표로 선임하여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결성하는 형식을 취했음.

○ 민주당은 다양한 계파가 모여서 만든 정당으로 정치이념적으로는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라고 표방하고 있으나,²⁵⁾ 2006년 4월 14일 민주당의 하토야마는 보수 중도와의 연대를 시사한 바 있는 것처럼,²⁶⁾ 민주당 내에서는 사회민주주의나 보수주의 등 보수, 중도, 좌파까지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당내에 대립에 생길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음.

- 당내에는 공산당(共産党)과 사민당(社民党)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위안부(일본인제외)」 대신에 「전시 성적강제피해자」라는 호칭을 바꾸자고 하는 그룹(오자와)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위안부문제와 난징(남경)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이라는 의원연맹(前原誠司)의 그룹으로 나뉘져 있음.

- 당내 주류파로서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주민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하는 의원연맹」(하토야마 유키오·오카다 카즈야)이라는 찬성그룹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연구회」라고 하여 반대하는 그룹이 대립하고 있음.²⁷⁾

나. 「죽도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입장

○ 민주당의 입장은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임」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민주당(광보 대변인)은 오자와가 언급에 대해, 「‘~라고 생각함. ~라고 하는 것은’ 오자와 대표의 특유의 말버릇임.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임.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음.²⁸⁾

○ 민주당은 현재 일본정부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자와 간사장도 민주당의 방침도 자민당처럼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음.

- 사실 「일본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외무성 관계자들 중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가 될 만한 권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이런 인식은 오자와도 마찬가지일 것임.

-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지만 자민당정부에서는 2005년 한국이 독도주변의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려고 했을 때, 자민당정부가 측량선을 파견하여 저지했던 것을 보면 오자와보다 더 독도 영유권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외무성 관료나 자민당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오자와도 일본의 국익을 담당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 그다지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음.

- 민주당 내에는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과 같은 소극적인 영유권론자도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영유권론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다. 「일본영토론」의 적극론자

○ 민주당 의원 중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한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무력공격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음.

- 「TV 아사히(朝日)」의 토론 프로에 나온 민주당 니시하라(西村) 의원은 「죽도문제」에 대해 「한국이 무력으로 죽도를 점령한다면 일본도 무력으로 대항해야한다」라고 발언을 했음.

- 일본헌법에는 무력침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역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것만으로도 주목할 가치가 있음.²⁹⁾

○ 이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응 중에는 「일본정부는 죽도는 일본영토

민주당 의원 중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한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무력공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음

국민여론의 반응 중에는 「일본정부는 죽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 일본영토인 이상, 일본에서 보면 한국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일본령을 점령하고 있는 형태

라는 인식, 일본영토인 이상, 일본에서 보면 한국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일본령을 점령하고 있는 형태임.

- 극단적인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한국이 군사력을 행사했을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무력행사에 대해 일본은 입으로만 항의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되었고 자위대가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충돌이 없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먼저 무력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이상 일단은 자위대를 발동할 조건은 되므로 자위대를 출동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자위대에 의한 실력행사는 선택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라는 견해도 있음.

- 이런 여론은 1952년 1월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일본 자위대³⁰⁾가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함.

- 사실 이때는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한국영토로 조치되어 한국인들이 어업을 종사하는 어로지가 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전승국인 연합국이 독도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어있을 시점이었음.

- 당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해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이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 그런데 연합국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묵인하고 최종적인 결정에서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 이러한 견해는 독도의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독도 영유권론자들의 대부분은 독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 있음.

라. 「일본영토론」의 신증론자

○ 민주당의원 중에는 하토야마수상, 오자와 간사장과 같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원도 있음.

- 2005년 2월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 의원이 있었음.³¹⁾

- 시마네현의원 고무로 슈메이(小室壽明)는 현의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충돌하는 영토문제는 우선 국가의 책임이므로 외교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한다. 각의결정에서 북방 영토의 날을 제정하여 널리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죽도문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개발하고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 2월 현의회 이후 죽도의 날 조례제정을 국가에 요구했고 이러한 자세를 관철시켜야할 것이다. 「죽도의 날 제정이 아니더라도, 당장 시급한 많은 현안이 많다고 하는 현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는데,³²⁾ 이는 사실 죽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해야한다는 발언은 아니라 단지 현의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임.

○ 고무로 의원은 지사는 물론이고 조례 제안자도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일관계의 중요성으로 보더라도 죽도문제로 양국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번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조례제정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고 비난하고 있음.³³⁾

- 고무로 의원의 조례제정 반대에 대해 국가의 영토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그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동해’라는 명칭과 병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음.³⁴⁾

○ 민주당의원들 중에는 신중하지 않게 독도문제로 소리를 내어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 같음.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라는 견해가 아니다. 이들의 「죽도문제」인식은 민주당의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기본방침과 상반되지 않다는 것임.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일관계의 중요성으로 보더라도 죽도문제로 양국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

외무성홈페이지에 「죽도문제」라는 항목을 두어 「죽도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일본어판, 영어판, 한국어판, 아라비아판, 중국어판, 프랑스판, 독일판, 포르투갈판, 러시아판, 스페인판 등 10개국의 언어로 표기하여 세계 각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고 있음

4. 외무성 기본방침의 수정가능성 유무

가. 외무성의 「죽도문제」 인식

- 과거 자민당정부에서 「죽도문제」에 대한 외무성기본방침으로 「죽도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이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³⁵⁾
 - 외무성홈페이지에 「죽도문제」라는 항목을 두어 「죽도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일본어판, 영어판, 한국어판, 아라비아판, 중국어판, 프랑스판, 독일판, 포르투갈판, 러시아판, 스페인판 등 10개국의 언어로 표기하여 세계 각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고 있음.
 - 일본국민에 대해서는 「한국의 출입국 수속을 밟고 죽도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협조를 촉구하고 있음. 그 이유는 한국의 출입국을 통하여 입도하는 것은 일본국민이 한국측의 관할권에 복종했다거나, 죽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임.



- 위의 지도는 자민당정부에서 작성한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죽도문제」라는 항목에 게재된 지도인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거리와 위치에서 본 지도를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입장만 부각시켜서 외형상 일본영토로 인식되도록 작성한 것임.

- 방법적으로는 일본본토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음. 양국 국민이 거주하는 울릉도와 오키섬이 존재하는 한 본토간의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간의 거리를 강조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10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게다가 거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보이는 거리이지만, 오키도와 독도는 서로 볼 수 없음. 이러한 내용은 아무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처럼 일본외무성은 지금까지 독도문제의 본질을 일본국민에게 알려려고 하지 않고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만 홍보해 왔음.

- 일본국민은 독도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만 알고 있음. 이것이 바로 독도문제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임.

- 독도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원인은 일본외무성에 있기 때문에 일본외무성이 변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며, 동아시아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당 정부가 변하려면 외무성홈페이지의 「죽도문제」를 공정한 내용으로 수정해야함.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정부도 전 자민당 정부와 별반 차이 없는 정부가 되고 말 것임에 분명함.

나.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게재문제

- 사실 민주당 내에는 구사회당 출신의 좌파, 보수세력 등 다양한 이념을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음.

- 민주당의 기본방침은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게다가 자민당은 물론이고, 영토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여론의 대다수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자민당은 반드시 「죽도문제를 명확히 종전처럼 일본영토로 명기

일본외무성은 지금까지 독도문제의 본질을 일본 국민에게 알려려고 하지 않고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의 입장만 홍보해왔음

자민당은 반드시 「죽도문제를 명확히 종전 처럼 일본영토로 명기할 것을 요구할 것임.」 그런데 하토야마는 우애정신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서 「죽도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

- 하토야마 수상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의 아킬레스 근에 해당하는 독도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것임.
 - 하토야마 정부는 2009년 금년 「고교신학습지도요령(高校新學習指導要領)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 이때에 독도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 올해는 한일합병 100년째라서 한국 국민은 일본의 역사인식에 더욱 민감해져있는 상황임. 이때에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하토야마가 독도문제를 어떻게 피하여 가느냐가 문제임. 만약 종래 자민당정부처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국익만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공동번영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택한다면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를 회피하게 될 것임.
 - 하토야마정부가 「고교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문제를 게재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하토야마 정부도 한일관계의 개선노력에 있어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임. 역시 일본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등 해외로부터 하토야마정부를 불신함으로 해서 민주당정부의 정치생명도 한계에 다다를 것임.³⁶⁾

5. 민주당정부의 독도문제 대응의 전망

○ 이상과 같이 과거 독도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자민당정부에서 정권

을 이어받은 민주당정부의 향후 독도정책에 대해 고찰해보았음.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당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민주당정부의 실세인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죽도」영유권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의 입장으로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
 -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차원의 인식이 정책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 다만 스스로 종래 자민당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정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이미 자민당정부에서 교육된 국민 여론과 자민당 등의 야당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
 - 자민당은 종래처럼 죽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는 의원내각제로서 자민당의 경우 6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일본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도중에 사퇴하게 되어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
 - 이처럼 국민여론을 가늠하는 총리의 지지율은 매우 중요함. 국민여론이 정권을 심판하기 때문에 일본은 정책결정 시 국민여론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의 인식이 그대로 민주당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임.
 -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간사장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죽도가 반드시 일본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소 갖고

민주당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죽도는 일본영토」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외무성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죽도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님

있는 듯함. 그러나 민주당의원들 중에는 자민당의원들처럼 적극적인 영유권론자들도 있고, 오자와 간사장이나 하토야마 수상과 같은 소극적인 의원들도 있음.

- 넷째, 외무성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죽도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님.
 - 자민당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정책입안 시 그 분야의 전문인 관료의 입장을 중시해왔음. 민주당정부가 관료주의를 청산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익을 대변하고 있는 외무성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죽도문제」에 대해 종래의 경향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내용수정을 지시할 정도로 관료의 업무를 간섭할 수 없을 것임.
- 다섯째, 결국 하토야마정부에서는 제일 한국인 등의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 현재 중단된 상태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북핵문제, 동아시아공동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하토야마 민주당정부는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이들 정책시행에 도움이 되므로 스스로 한일관계를 냉각시키는 적극적인 독도정책은 자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 석

- 1)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2) 일본에서는 독도를 「竹島」라고 쓰고 「다케시마」라고 읽음. 본고에서는 편의상 일본의 호칭으로서 「죽도」라고 표기함.
- 3)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
- 4)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
- 5) 「[디카] 환-일 정상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2009-10-09, 「NEWS-A」, http://www.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5586&flag
- 6)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
- 7)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 8)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
- 9) 「竹島は日本の領土と思っている」 小沢代表発言ネットで瞞みつかれる」, 「J-CASTニュース」 2008年11月07日18時41分,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3891453/ (2009년 9월 10일 검색) 이하 오자와 관련내용은 모두 본 기사에서 인용한 것임.
- 10) 「韓国、中国、アメリカの首脳にズケズケ言っています」, 오자와 대표가 2008년 11월 3일 투고 동영상 사이트 「ニコニコ動画」의 생방송 「1만인 네티즌 회견」에 출연하여 네티즌들이 보낸 질문에 답했다. 회견장은 축제가 열리고 있던 東洋大学에서 사회의 질문에 대답했음.

- 11)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948-1976)』 제1부, 동북아역사재단, 2009.
- 12) 광진오, 「국회속기록을 통해본 독도의 영유권」,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연구총서를 위해 독도관련 연구회」 프로시딩 참조.
- 13) <“いづれどっちかに決めなきゃいかんでしょう”と以前に発言> <朝日新聞> 2008년 7월 16일의 내용임.
- 14) <産経新聞> 2008년 7월 16일.
- 15) 「民主・小沢氏 “日韓で話を”」, <日経>, 2008년 7월 16일, 「小沢の売国発言 竹島問題(投稿者: 一般人)」, <http://www.rondan.co.jp/html/mail/0807/080716-19.html>
- 16) 外務省, <竹島問題: 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 17) <竹島・韓国主張を否定> 2007년 2월 22일, http://blog.livedoor.jp/the_radical_right/archives/51347628.html
- 18) 「竹島返還よりも在日の参政権に熱心な小沢民主党代表?」, 2008년 2월 23일, http://mikitogo.at.webry.info/200802/article_18.html
- 19) 「新学習指導要領の竹島問題」, <http://www.rondan.co.jp/html/mail/0807/080714-22.html>
- 20) 「見逃していた! 小沢民主党代表: 竹島問題」, <http://jiji-bibouroku.blog.so-net.ne.jp/2008-07-17-2>
- 21) 「竹島は日本の領土と思っている」, 小沢代表発言ネットで噛みつかれる」, 『J-CASTニュース』 2008년 11월 07일 18時 41分,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3891453/> (2009년 9월 10일 검색)
- 22) 「ニコニコ動画」의 댓글란의 멘트.
- 23) 「2ちゃんねる」의 멘트
- 24) 1998년 4월 원내 회파인 「民主友愛太陽国民連合」(民友連)에 참가했던 구 민주당·민정당·신당우애·민주개혁연합가 합류하여 결성됨.
- 25) 「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 26) 「鳩山由紀夫をもっとよく知りたい人のための資料集【簡略版】」, 『エラ通信のチラシの裏』, 2009/05/18, era-tsushin.at.webry.info/200905/article_88.html
- 27) 보수·중도우파인 자민당에 대해 일반적으로 리버럴 중도좌파 정당이라고 하지만, 보수적인 의원도 포함되어 있음. 또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의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鳩山由紀夫는 「좌파는 민주당의 이념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음.
- 28) <J-CAST 뉴스>(종래의 메스컴과 달리 유니크한 시점으로 비즈니스나 미디어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발신하고 있음. 독도투고의 코멘트 란도 충실히 하고 있음.)가 취재한 것임.
- 29) 「さきほどテレビ朝日の討論番組のなかで竹島問題に触れ民主党の西村議員が、韓国が...」(ID非公開さん),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43584694(2009년 9월 10일 검색), 본 내용은 「200년 3월 28일」 기사임. 내티즌(ID非公開さん)의 대답 중 일본에서 뽑은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함.
- 30) 1950년 7월 8일 경찰예비대 창설, 1952년 8월 안보청 개설, 그해 10월 경찰예비대 개편 준군사적 조직으로 함, 1954년 7월 1일 자위대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음. 최장근, 『일본정치와 사회, 그리고 영토』 학사원, 2004, pp.169-170.
- 31) 「(再掲)「竹島の日」制定に反対した民主党。しかも...:イザ!」, <http://kuro-neko.iza.ne.jp/blog/entry/930856/>
- 32) <“竹島の 날” 기념식전에서 民主党、社民党、共産党은 아무런 연설도 하지 않았음, 당초 民主党은 「죽도의 날」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유일한 정당임」, <http://kuro-neko.iza.ne.jp/blog/entry/930856/>. 당시의 민주당 현의원·小室寿明는 島根1구·차기 중의원선거에서 民主党 공인후보자임.
- 33) “竹島の日条例 賛成”. 「平成17年(현의회) 第404回定例会(第4日目)」 2005.06.29, <http://dbs.pref.shimane.jp/dsweb>

- 34) “竹島の日条例 賛成”. 「平成17年（현의회）
第404回定例会（第4日目）」 2005.06.29,
<http://dbs.pref.shimane.jp/dsweb>
- 35) 「竹島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 36) 「鳩山政権に期待感＝竹島問題で対立懸念も－韓国」,
『ソウル時事』 2009년 8월 31일,
<http://www.jiji.com/jc/zc?k=200908/2009083101161>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